

2018년 광주광역시 지방선거 정책공약 분석결과에 따른 민주시민교육과제

심연수*

<국문요약>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한국의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자와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 및 정당들의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적 틀인 정치시스템에 대한 리터러시(문해력)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선거 공약은 도시 거버넌스와 공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시스템에 관한 이해력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결론들 중의 하나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을 보다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치시스템에 대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시스템 리터러시(문해력), 정치시스템 리터러시, 선거 공약, 민주시민교육, 광주광역시

*심연수 (E-mail : shim4822@naver.com)

학위취득대학: 서울대학교

현직 :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논문접수일: 2018년 6월24일, 논문수정일: 2018년 8월9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10일

A Study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2018 Gwangju Metropolitan City Election Policy Commitment Analysis

Shim, Yeon-soo

Abstract

I analyze unfamiliar aspects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Korean local elections held on June 13, 2018.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the election promises made by the mayoral candidate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uperintendent candidates of th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uggest that they lack political system literacy, a concept that is defined in general and as a means of cultiv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election promises promised to the voters are analyzed in terms of political system literacy in relation to current issues in city governance and to problems in public education. One conclusion from this analysis is that better efforts must be made to educate the future leaders of the Korean political system from an early age to improve their political system literacy as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Keyword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ystem literacy, political system literacy, election promises, Gwangju Metropolitan City*

I. 서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3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시스템은 주기적인 선거시스템을 갖고 있다. 한국의 선거는 크게 5년 단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4년 임기의 무제한적 선출될 수 있는 단원제하의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형식적이고 4년 마다 반복되는 지방선거로 크게 구별된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처음 민주공화정부를 수립한 이후로 수많은 선거를 실시하였고 2018년 현재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주도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은 현행 한국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정치의 보다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시되게 되는 정책공약은 한국정치문화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되는 정책공약들이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여 숙고된 결과는 궁극적으로 특정사회의 정치적 시민성이 잘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심연수 2010).

특히, 분별력 있는(deliberative)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선거후보자와 정당들에게 의무적으로 선거 기간에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책공약들은 필요하지만 선거기간동안 캠페인과 연관을 지어서 얼마나 잘 활용 되었는가와 그 실천성에 있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런 정책공약들의 올바른 평가와 실천은 정치사회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네가티브 피드백에 의한 복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심연수 2015).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있어서 2018년 지방선거과정에 나타난 정책공약캠페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정책공약의 판단력 향상과 실천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이렇게 선거기간에 제출된 정책공약들은 정치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입각해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한국의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공약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마인드와 생각, 그리고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시스템 리터러시(system literacy)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광주광역시의 시장 후보자들과 정당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시스템 리터러시 분석을 한다.

II. 한국 정치체제에서 지방선거의 의미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선거를 통한 통제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게 한다. 선거에 관한 시민들의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선거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하고 정치 공동체의 안정과 합법성을 강화한다. 선거는 시민들을 서로 연결시켜 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회 정치적 통합을 촉진한다. 또한 선거는 인간으로서의 개인 시민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인함으로써 자기실현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강화한다. 출마자들은 선거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과 자신이 속한 정당과 같은 정치집단의 공공정책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지지 호소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가 지방선거이다. 한국의 현행 헌법 구조 하에서 지방선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중앙정부, 구체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다음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다. 확정된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지방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정책 및 지역편의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연히 중앙정부와 국회권력에 따라서 배분된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자연히 중앙정부의 장악력과 국회권력이 지방선거에 자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시스템의 존속과 정치시스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지지도 자연히 중앙정부와 국회권력의 구조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지방선거는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권력을 갖는데 그 연결고리로서 작동해왔고, 한국의 지방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요구되어왔다.

Ⅲ. 한국 정치체계에서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의 의미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파우웰(G. Bingham J. Powell Jr.)은 “정치체계란 상호작용하는 역할들, 구조들, 하위체계들 및 이러한 상호작용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 심리성향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체계에의 투입을 요구와 지지로 구분하였다.

알몬드와 파우웰은 정치시스템은 1)재화와 서비스의 배분에 대한 요구 (임금, 노동시간법, 교육기회, 오락시설, 수송 등에 대한 요구) 2)행태규제에 대한 요구(예를 들면 공안대책, 시장통제, 결혼과 건강 및 공중위생에 대한 법규) 3)정치체계에의 참여 (예를 들면 투표권, 공무담임권, 정부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청원권, 정치결사조직권) 4)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에 대한 요구(예를 들면 규범의 확보, 정치엘리트의 정책의향에 대한 의사소통, 위험 또는 의식적인 행사시의 위엄 및 권력과시 등에 대한 요구) 등에 직면하게 된다. 요구는 체계의 정책 내지 목표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재화와 서비스, 복종 및 존경과 같은 지지는 체계의 목표를 성취하게 한다. 알몬드와 파우웰은 투입과 산출의 소통은 정치체계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분석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능 즉, 체계능력(capabilities), 변환과정, 그리고 체계유지 및 적응기능을 범주화했다. 체계능력은 정치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규제, 발취적(extractive), 배분적(distributive), 반응적 능력으로 나뉘는데 정치체계구성원들의 요구라는 투입에 의해서 산출된다.

변환과정은 정치체계가 투입을 산출로 변화시키는 양식이고 체계유지와 적응기능은 정치체계 내에서 사회화(socialization)와 충원에 의해서 수행된다. 정치체계에서 정치적 행동을 위한 이익들, 주장들 및 요구들을 표출시키는 이익표출기능은 정치사회화기능과 그것에 의해서 생긴 정치문화유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요구들을 표출시키는 개방된 장치로서 선거에서 정책공약의 기능이 있다. 선거에서 정책공약은 공공정책의 집행, 즉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서비스와 혜택 또는 행태의 규제를 통해서 정치체계의 경제, 사회구조 및 문화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므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광역시 도시와 도시교육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전체 예산과 제시한 공약간의 유관관계와 그리고 1년이 아닌 4년 임기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밝히는지도 중요하다.

IV. 광주광역시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공약

여기서는 2018년 6월13일 실시된 한국의 지방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 정책공약들을 분석했다(<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ocalList.do>). 정당들의 10대 공약과 광주광역시장후보자들의 10대 정책공약,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후보자들의 5대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해 본다.

먼저, 정당들의 정책공약을 분석하고 정치시스템의 리더러시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각 정당들의 10대 정책공약들이 제시되어 유권자들이 정당들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유권자들은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비례대표의원들을 뽑기 위해서 정당들의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한다.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일을 할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위해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하게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된 공약들을 검토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구별의식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만 유일하게 호남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을 10대 공약에서 하고 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외교안보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행정과 관리의 핵심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시스템에서 전체와 부분을 구별하는 정치체계에 관련된 의식이 부족하고, 시스템의 부분들 간을 상호연계 시키는 마인드도 부족하다. 그리고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개념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지 거리에 배회하는 상품구매자들을 유혹하는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지 못한 포스터나 광고물에 불과하다.

정치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른 산출과 그에 따른 지지의 연속성이 특정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선거 때 유권자들의 요구들을 잘 필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지지를 창출시키는 이념 정책 정당이 부재하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광주광역시의 주요 3대정당의 당명이 4년 전의 지방선거와 다르다는 사실은 정당의 이합집산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강과 당강령에 기초한 정책을 산출해 나가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산시켜 왔다면 정당의 이합집산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 정당의 지속성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있지 않았고 단지 정치권력을 산출하는데 유리한 방향에서 변화를 계속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의 정책공약제시와 이를 통한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공약에 대한 정치문화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공약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소홀하였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광역시장후보자들이 제시한 10대 정책공약과 교육감후보자들이 제시한 5대 정책공약을 분석하고 정치시스템의 리터러시 측면에서 살펴본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310조1612억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들이 임기 4년간 운영할 지방 재정의 규모는 1240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2018년 예산은 4조 5,139억 원이다.

이중 한국 중앙정부에서 광주광역시에 지원해 주는 국가보조금은 1조3,902억 원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의 30.80%에 해당한다. 이번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한 후보를 제외하고 세 명의 후보는 자신들의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의 근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당선 이후 4년 임기 도중에 전체 예산중에서 공약이 차지하는 예산비중,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예산의 증감을 통해서 공약 실현하겠다는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 자신이 시장이 되어서 현재의 시의 예산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감하여 특정 공약에 배정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이런 점에서 시의 행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의식이 미약하다고 본다. 또한 후보자들은 임기 4년간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제시되지 못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dynamics)를 함양해야 하는 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그나마도 교육감 후보자들과는 달리 시장후보자들은 개략적인 예산의 근거와 액수를 제시하고는 있다.

한국의 17개 광역단위의 시와 도의 교육감이 다루는 1년 예산은 68조원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위의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시도에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한다. 즉 이들은 한국 전체 48만명 교원 인사와 대학을 제외한 각종 학교의 인허가, 교원 정책 등도 결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은 2조 25억 원이다. 한국의 중앙정부로부터 1조6213억 원을 지원받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로 부터는 3264억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8년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다. 당시의 지방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 모두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의 원천에 대해서는 시스템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의 원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으로만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 후보자들 중에서 당선자는 4년 임기동안 약 8조 100억원 (2018년 예산기준)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정책공약의 구체적인 재원비중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공약실행예산의 근거에 대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광주광역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유권자들도

이들이 제기하는 교육 아젠다와 이슈를 마치 포스터나 광고물로 취급을 하였고 그나마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는 광주교육시스템의 실패는 자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다.

V.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정치문화의 측면과 법제도의 측면의 보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정치시스템 리더러시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본다.

먼저 한국의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시스템 리더러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정치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정치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여 구성원들의 지지근거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국의 지방선거과정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정치시스템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치변동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정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치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유권자들은 공약실천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고, 후보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해서는 단지 승리를 위한 이슈와 아젠다를 개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선거에서 정책공약은 근본적으로 구속력을 결여하고 있다.

한국 정치시스템에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시스템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들이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즉, 한국 정치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시스템에서는 선거시스템간의 경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스템이론에서 다른 시스템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정체성 위기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유권자들은 환경과의 경계를 구별하는 시스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선거시스템의 구별의식이 향후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이렇게 각종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을 상호 구별하지 않으려는 인식의 출발점은 단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한국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은 승리를 위한 선거캠페인의 중요한 전략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와 국회권력 그리고 유권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정책공약은 단지 선거캠페인에서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정치시스템의 동태성이 부각될 수 없다. 단지 선거캠페인은 하나의 연극적 반전처럼 그 역할이 지속되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치시스템의 체계능력을 철저히 무시한 상태에서 구태의연한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 2018년 현행 한국의 헌법으로는 지방자치는 형식에 불과하였다.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의 재생산이 중앙에서 지방까지 획일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지적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2018년 한국의 지방선거과정에는 과거 유교 권위주의적 정서가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선거캠페인 과정에서는 지방정치시스템의 포폴리즘적 이익표출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란 자율규제정신이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지방선거과정 전체에서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율규제능력이 부족하였다. 즉, 한국은 2018년 현행 헌법 하에서 공영선거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유권자와 시민들 스스

로 선택을 하여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여 선거를 치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신과 현행 헌법 정신이 과연 조화가 되고 있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방정치시스템에 항상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시스템에는 항상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그런 항상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정당들의 경우에 지방분권이라는 현재 헌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항상성에 대한 인식을 일종의 플라톤적인 이데아로서 제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이데아로 돌리고 있는 현상을 2018년 한국의 지방 선거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환경에 대응하는 지방정치시스템의 공진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점은 2018년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부가 주변 국가와의 보다 나은 관계개선을 획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중앙정부의 주변 환경과의 공진화적인 노력과 광주광역시가 병행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였다. 이 점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여하튼 지방선거에서 제기되는 정책공약들은 주변국가의 변화와 대응 되어서 공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에 출마한 그 어떤 후보자들과 정당들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대응되어 변화하는 주변정세에 공진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관련지어서 광주광역시가 한반도 주변 정치시스템의 적응적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지방선거에 나선 입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유권자들에 대한 진정한 지지와 호소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점들은 향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에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치사회화를 통해 정치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을 함양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심연수. 2016. “Resilience and Ecological Citizenship in Socio-Ecological Systems.” 『인문사회과학연구』 53집: 5-24.
- 심연수. 2010.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27집: 5-27.
- Dubberly, Hugh. 2014. A Systems Literacy Manifesto. In: Proceedings of RSD3, Third Symposium of Relating Systems Thinking to Design, 15-17 Oct 2014, Oslo, Norway. Available at <http://openresearch.ocadu.ca/id/eprint/2058/> (검색일:2018년 6월13일).
- Dubberly, Hugh. A Systems Literacy Manifesto. Relating Systems Thinking and Design 2014 working paper. www.systemic-design.net (검색일:2018년 6월13일).
-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ocalList.do> (검색일:2018년 6월13일).